

광주전남 통합 직능별 시민공청회- 경제·산업

“통합은 지역산업 확장·일자리 창출 경제 도약 계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북구 스테이지(빛고를 창업스테이션)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제분야 시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통합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있다.

AI·반도체 등 산업계·경제단체·농업인 등 100여명 참석
제조업 데이터화·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산업 규모 확장을

광주전남 통합이 지역 산업의 확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시는 26일 광주창업거점인 북구 스테이지(빛고를창업스테이션)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경제·산업 분야 직능별 시민공청회’를 열고 경제단체, 산업계, 농업인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광주시가 자치구 순회 권역별 시민공청회와 병행해 분야별로 추진하는 직능별 의견 수렴으로,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반도체·인공지능·에너지 산업계, 경제단

체, 농민단체, 광주연구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경제단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투자유치 여건 개선과 기업 활동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도입을 위한 제조업의 데이터화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통해 행정통합의 효과를 키우고 지역 산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의 광역 단위 정책 추진으로 인한 판로 확대, 농가 소득 증대 가능성을 언급하며 광주지역의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광주전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을 합치는 것이 아닌 산업과 일자

리, 인구구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기회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강기정 시장은 “일지리를 만들고 산업을 키우는 데 연간 5조원을 쓸 수 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며 “통합으로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이 머무는 특별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민주주의로 화려하게 등장한 광주가 부강한 광주로, 통합 이후 부강한 광주·전남으로 나아가도록 현장의 기대와 제안을 반영해 실질적인 통합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합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권역별 시민공청회와 함께 보건복지, 여성·아동, 교육·청년, 문화체육 등 분야별 직능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통합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구청장協 “통합청사 주 소재지는 광주”

인프라·상징성 등 근거…“명칭은 유연하게 수용”

광주구청장협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통합청사의 주 소재지가 ‘광주’에 있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통합시 명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최근 ‘통합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고 통합청사 주 소재지를 전남 무안으로 한다’는 잠정 합의안은 통합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가 호남권의 상징적 중심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형성된 민주·자치·연대의 가치를 축적해 온 광주는 광주·전남 공동체의 정체성과 결속을 이끌어 온 중심 도시로, 국내외에 각인된 강력한 도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합청사가 광주에 위치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시설 배치를 넘어 통합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통합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중심지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남 서부·남부·동부권을 방사형으로 연결하는 광주는 광역화된 통합시의 행정력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는 주장이다. 다수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권의 중심 역시 광주라는 점을 피력했다.

통합시 경쟁력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이미 광주에 집적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비롯해 문화·예술·체육, 청년·교육 분야에서 국가 정책과 민간 투자가 집중된 도시로, 행정·산업·연구·의료·교육·문화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갖춰져 있어 통합 행정체계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KTX·SRT, 고속도로망, 공항과 연계



광주구청장협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통합청사의 주 소재지는 ‘광주’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된 교통·물류 접근성 역시 수도권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현재 논의 중인 통합명칭 안으로 거론되는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전남특별시’, ‘전라도광주특별시’ 등 세 가지 안에 대해 “통합청사 주 소재지가 광주로 확정된다면 어느 명칭이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적 명분이나 형식보다 행정

효율과 광주·전남의 미래 경쟁력을 우선하겠다는 대승적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통합청사 주 소재지가 광주가 될 수 있도록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며 “이번 행정통합이 진정한 상생과 균형발전, 호남 도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위 북구지부 발대

주민 의견 온·오프라인 취합…국회·정부 전달 계획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위 북구지부가 26일 발대식을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통합 비전 확산에 나섰다.

이번 발대식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 축을 광주·전남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행정통합 추진경과 및 내용 설명, 범 주민 결의문 낭독,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 주민, 여성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인사 100여명이 참여, 행정통합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북구 주민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북구를 중심 축으로 한 광주·전남 상생 대통합 추진 △광주전남 특별시 첨단·경제도시 도약 지원 △통합을 향한 북구주민 서명 운동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상범 북구 지부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 축을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주민들과 함께 통합으로 만드는 성공 모델을 북구 지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지부는 주민들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해 모인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위 북구지부가 26일 발대식을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통합 비전 확산에 나섰다.

윤혜영 광산구의원,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제1선거구…“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총력”

윤혜영 광주 광산구의원(사진)이 26일 광산구 제1선거구 광주시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혜영 구의원은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가장 오래 살아왔고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광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지난 8년간 광산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온 점을 피력하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광역의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구의원은 기존 활동 지역인 제2선거구가 아닌 제1선거구로 출마하게 된 배경도 밝혔다.

그는 “삶의 터전인 송정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며 학교와 마을, 생활현장을 함께해 왔다”며 “소상공인으로서의 활동과 사회복지 현장, 지역 공동



체 참여 속에서 정치를 시작한 만큼 제1선거구로 출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구의원은 미래 광산 발전을 위한 △변화에 준비된 책임 있는 광산 △돌봄과 복지가 일상에서 이어지는 광산 △아이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산 △농촌과 도시가 균형을 이루는 광산 △일자리와 산업, 공공 기능이 커지는 광산 등 5대 비전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비전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례와 예산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살피고, 시민과의 소통과 속의를 바탕으로 광역의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 축제, ‘W.A.V.E 전략’으로 새 판 지다

통합 브랜드·접근성 강화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안

전남 축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개최 횟수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을 이룬 가운데, 이제는 단기 이벤트를 넘어 지역의 문화·관광·경제를 함께 끌어올리는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남 축제를 ‘변화의 물결(W.A.V.E)’ 전략으로 재편해 K-컬처를 선도하는 글로벌 축제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연구원은 26일 JN1 이슈리포트 ‘변화의 물결(W.A.V.E), 전남 축제의 성장 전략’을 발간하고, 전남 축제의 현 주소를 진단하며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전남이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축제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는 축제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재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개최계획(2016~2025)에 따르면 전남의 축제 개최 수는 2016년 44개로 전국 7위에 머물

렀으나, 2025년에는 143개로 늘어 전국 2위로 올라섰다. 다만 축제 수의 증가는 곧바로 관광 경쟁력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성공 축제가 공통적으로 갖는 요소를 균형 있게 확보하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전남 축제가 지역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역이나 주제별로 흩어진 축제를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묶고, 공동 홍보와 통합 입장권, 축제 여권 스탬프 같은 연계 장치를 도입할 경우 인지도와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축제 접근성을 높이는 과제도 중요하게 제시됐다. 전남 관광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 축제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시간 혼잡도와 교통·주차 정보를 제공해 방문객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선관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내달 3일부터… 시도지사·교육감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면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무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들은 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고, 관할 시도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 기준으로 29세 이하라면 500만원, 선거일 기준으로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엔 7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한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5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작성·발송할 수 있다. 또한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소지도 가능하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는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고, 현직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